

민주 “7대 제안 수용을” vs 국힘 “방사능 검출시 책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방 “국제재판소 제소 등 통과시켜야” 與 “수산물 안전성 토론회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원전 오염수 특위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수산물 방사능검사 확대 조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를 거부한 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며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여당과 협의하겠다. 동시에 국회 검증특위와 청문회 실시를 관철하도록 여당과 끈기있게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정부 당국자는 응당 대한민국 국익, 국민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데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IAEA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국회 특위와 청문회 진행해야 한다며 IAEA 보고서에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 반대할 것이라고 한다”며 “IAEA 보고서대로 따라갈 거면 국회특위 왜 구성하고 청문회는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태스크포스(TF)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5~7개월 후 우리나라 해역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방사능 과감 논리에 찬성하는 학자들을 향해 전문가 토론회를 제안했다.

성일중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과감 대응·어민 보호대책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방류) 5~7개월 후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해 오염물질이 나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며 “민주당은 방사능이 유입되지 않으면 책임지길 바란다.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 처리수가 해류에 따라 태평양을 돈 뒤 5~7개월 후에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방류 5~7개월 후에 우리나라 동·서·남해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도에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오염수가 이미 방출됐다. 우리 바다에 영향이 없다는 데이터가 있다”며 “다핵종저거설비(ALPS·알프스)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거의 다 제거됐고, 국제적 기준치 이내로 방류한다면 국제기구와 11개

국 검증단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몇몇 정치인들로 인해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며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모두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성 위원장은 특히 방류 5~7개월 후에 우리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TF는 또 민주당에 오염 처리수 유입과 수산물 안전성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제안했다.

성 위원장은 “과당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과학은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해 전파속도가 느리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과감은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를 기저에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낙연 “DJ정신은 제 정치의 원점”

국립현충원 DJ 묘역 참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동작 국립현충원 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DJ 묘역에 도착, 민주당 설훈·운영찬 의원과 함께 참배했다.

묘역 옆에는 ‘제45대 국무총리 이낙연’이라고 적힌 화환과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보낸 꽃다발 등이 위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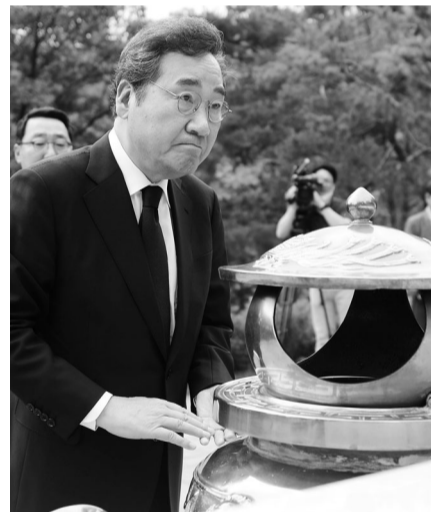
이 전 대표는 분향 후 약 30초 동안 꿇길게 묵념을 했다. 이후 묘역 앞에서 설훈, 운영찬 의원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이 전 대표는 뭔가 설명하듯 손짓하며 말했고, 두 의원은 이 전 대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이 전 대표 측근들은 그가 현충원 참배를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봉하마을 등 방문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묘역 참배로 이 전 대표가 국내 정치 복귀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 방문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DJ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다. 그래서 1년 전 출국할 때 여기 와서 출국 인사 드렸던 것처럼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선 “우선 인사드릴 곳은 인사드릴 것이다. 현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거기까지 (행보를) 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두되고 있는 역할론에 대한 입장, 입국 시 ‘뭇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것의 구체적 의미 등을 묻자 답변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참배 일정 소화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서울 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귀국보고를 드렸다. 귀국후 첫 공식일정”이라며 “김대중 정신은 제 정치의 원점이다.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괴로운 시기,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이동관 임명 강행,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언론관 국정농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언론인 불

락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방송을 탄압하는 데 정보기관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오기 인사는 이제 멈춰야 한다. 국민의 뜻을 짓밟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언론장악에 들이는 노력의 반의 반이라도 붕괴되어가는 민생경제에 쏟아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차담 나누는 김기현-배진교-이재명 김기현(왼쪽부터) 국민의힘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경향포럼에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경향신문 제공**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유가족·야4당 국회의원 행진 72시간 집중공동행동 선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야4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달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불발더위 속 행진을 벌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72시간 집중공동행동’을 선포했다.

회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외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 의원과 정치인들이 함께 했다.

송진영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은 “이 법은 미래에 이태원, 세월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자식이 왜 서울 한복판에서 길 걸다 사망했는

지 그 이유를 묻고 진실을 찾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을 개대지로 여기는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유가족을 모욕하고 탄압하는 등 3년 전 세월호 참사 때와 조금도 바뀐 게 없다”고 질타했다.

야4당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6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내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부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전혀 서명하지 않았고 가족들조차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견 뒤에는 분향소를 출발해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재판이 열리는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거쳐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을 지나 국회 앞 단식 농성장까지 약 8.8km 행진도 진행했

다.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경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과 고 박가영씨의 어머니인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은 지난 20일부터 9일째 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오후 1시 기준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이따금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특별법을 정쟁이라 말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6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심사 △참사 1주기 전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공동발의했으나,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서울=김선욱 기자**